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 협의회는 지난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시도의회 의장들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국 시도의장 “지방이전 기업 국고지원 확대해야”

임시회 열고 시설 하우스 라돈가스 피해 대책
노후 상수관 교체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등 요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지방이전 기업 국고지원 확대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을 비롯해 시설 하우스 라돈가스 피해 대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노후 수도관 교체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야생동물 피해 및 보호 정책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우선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성과가 높을수록 해당 지방정부가 지급해야 할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보니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방 이전 기업의 국비 지원비율 상향을 건의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시설 하우스 라돈농도 관리 조례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률상 적용대상에 시설 하우스는 빠져 있어 조례제정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 4대 협의체 중 지방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밖에 전국 지자체마다 누수량이 많지만, 노후 상수관 교체는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데다 수돗물의 요금이 생산원가보다 낮아 지방정부의 상수관 교체사업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노후 수도관 정비 국고보조 필요성도 제안했다. /고민형 기자

문 대통령 “檢, 개혁 요구 성찰해야”

“검찰권 행사 방식 ·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 이뤄져야
엄정하면서도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갖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며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최근 조 장관 관련 수사 상황이 수시로 외부에 유출되고 있는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조 장관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을 야당 의원이 공개한 것과 관련,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당과 무엇보다도 국민이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정치 검사와 정쟁 야당의 검은 내통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 검사가 있다면 속히 색출해서 사법처리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검찰이 얼마나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의 두 달 가까이 보도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그것과 동시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무척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해 검찰은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석해주길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과 통화한 사실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 요란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에서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강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이유 여하를 물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강경화 외교장관 “북미 실무협상 재개시 싱가포르 합의 진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북미 간에) 협상이 재개되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번째 정상회담에서 도달한 3~4개의 합의에 빠른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을 방문 중인 강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 PBS에 출연해 “하노이는 합의로 끝나지 않았지만 양측은 상대방의 기대에 대해 훨씬 잘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시스

폐 조선소가 꿈꾸는 희망 엿보기

도의회, 도시재생뉴딜연구회
통영시 도시재생사업 벤치마킹

전북도의회 ‘도시재생뉴딜연구회’가 지난 2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연구회 선진지 답사를 위해 통영시 봉평지구를 찾았다.

전라북도의회 ‘도시재생뉴딜연구회’(대표의원 조동용)가 지난 2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연구회 선진지답사를 위해 통영시 봉평지구를 찾았다.

통영시 봉평지구는 조선업 불황으로 문을 닫은 구 신아조선소와 인근을 포함한 50만㎡ 부지의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문화-관광-해양산업 허브 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를 표방하며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정부로부터 국비지원 사항의 승인을 받은 곳이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리스타트 플랫폼, 주민커뮤니티 플랫폼, 수변 문화공간 조성 등이 있으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조동용의원을 포함한 도시재생연구단체 참여의원들은 현장을 둘러보고 통영시 관계자로부터 그간의 국제공모 마스터플랜 추진 과정, 그리고 공론화 및 국비지원 승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현장 안내와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맡은 통영시 도시재생과장은 “폐산업시설을 국제적 수준의 관광지로 거듭나게 하려는 통영시의 의지가 매우 강하고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도 높다”면서 “다만, 토양오염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사전에 감안하지 못한 것은 다른 시도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문제”라고 조언했다.

조동용 대표의원은 “주력산업 불황이 야기한 지역경제 침체는 통영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 역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통영시 봉평지구의 사례는 규모가 큰 만큼 전략적인 모험으로 평가해볼 수 있고, 국제공모 추진에 관해서는 우수사례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북도에서도 폐산업시설의 대규모 도시재생을 시도할 경우 통영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환경적 요인을 검토하는 데 일차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민간기업 유치가 성공요인의 최대 관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공무원 민간 인사청탁 금지 법제화’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도입

기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민간에 인사·채용·협찬 등 부정청탁을 하는 관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공익신고에만 국한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행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추진 과제를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각급기관의 제도운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국민·기업의 인식 확산을 확산하고 청탁금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민간에 대해 인사·채용·협찬 등 각종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른 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외부강의 후 받는 사례금의 경우에만 한해 사후 신고를 허용, 신고제도의 합리성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뿌리깊게 형성된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 노력에도 나선다.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소속기관과 산하·유관기관에 청탁금지법 준수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언론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언론분야에 특화된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 보급하고 우선적으로 강의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뉴시스